전세계적으로 핀테크가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이에 따라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에서 정부의 주도하에 ‘현금 없는 사회’를 계획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의 추세에 발맞춰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 ‘블록체인 협의회’ 등을 출범을 통해 금융, 공공, 유통 등 여러 산업분야로 블록체인을 융합하여 인증시스템과 부정거래 방지 서비스를 개선하여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보안 시스템과 디지털통화 제도화에 대한 중추석을 건립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내년 초부터 202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의 초안인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첫 단계로 내년초부터 편의점에서 잔돈을 선불식 교통카드에 충전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년 600여억 원 가량의 동전 발행과 관리비를 절약 할 수 있으며 동전 사용의 불편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국내 결제시스템은 거의 모든 상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와 OECD 최상위권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무선인터넷 보급률을 기반으로 발전한 간편 결제 서비스(페이)가 활성화 돼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한 기반이 충분한 상태이다.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볼 법한 ‘현금 없는 사회’가 핀테크의 발전을 통해 거의 실현이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핀테크에 의해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핀테크 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때문이다.

정보기술(IT) 분야 기술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산업의 특성상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갖춰줘야 하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환경과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해 다루어 인터넷을 접속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핀테크화 되어가는 은행권에 대해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나 신용도가 낮은 계층 등 많은 수의 이들이 온라인 거래에 소외되어 금융거래 취약계층이 생기는 거에 대한 보완책을 아직 우리나라 핀테크 시장에선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이상 고령층과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카드보다 현금 이용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이러한 통계 자료에 의해 ‘디지털 문맹’으로 불리는 노년층을 해결하기 전까진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게다가 매우 혼란스러운 현 시국을 만든 장본인인 현 국가 원수 박근혜의 주력 사업인 ‘창조경제사업’에 의해 건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씨의 측근 차은택씨가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아 사업에 개입하였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현 시국에 대응하여 수백명의 기업인들이 이용한 이 센터에 대해 내년도 운영 예산 15억원 가운데 7억 5000만원을 삭감했고 사업 경비 등 출연금 지원과 공무원 파견 등 행정 지원 내용을 담은 지원조례안도 국비 지원 결과를 보고 결정키로 하는 등 보류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에 의해 지난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KT가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 대한 의혹을 샀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인사청탁을 한 사실도 확인되어 현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KT의 지원도 불투명하게 됨으로써 창조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핀테크 육성이 제동에 걸렸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핀테크 발전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필자의 의견으론 소위 ‘디지털 문맹’으로 불리는 계층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근본적인 방법이지만 실현되기 어렵고 힘든 방법인 그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한다. 마치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이 삼강행실도, 농사직설 같은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서적들을 읽을 수 있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에만 바쁜 부패한 관리들에 맞설 힘을 갖게 한 훈민정음처럼 핀테크에 관한 교육활동을 통해 온 국민이 핀테크를 사용하게 되면 간편하고 투명한 경제 활동을 통해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비리를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권을 이용해 이득을 챙긴 이들의 도구가 된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실제론 이 프로젝트 안에는 핀테크, FCEV(수소전기자동차)인프라, 빅데이터, O2O 등 미래의 차기 대한민국 주력 수출 사업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시국을 만든 이들의 비리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만 성장해가는 새싹들의 터전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기존 금융체제의 자리를 대체해 가는 핀테크 특성상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 규제와 맞서고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닦는 과정이 동행해야 하는데 현재 일궈낸 성과도 없고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 생각하여 이를 제재하는 판단은 옳지 않다.

이러한 잣대대신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적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뿌리 없는 단기적 성과에 매달릴 경우 우리는 진정한 변화에 필요한 생태계적 준비를 포기해야 한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성하듯이 단기적인 성과보단 미래의 금융 패러다임을 다져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켜보는 사업 전력이 필요로 할 것이다.

위의 언급한 내용처럼 ‘현금 없는 사회’처럼 우리나라 핀테크의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나라가 매우 혼잡한 상황이라 많은 지원을 받기엔 힘들고 게다가 많은 나라들이 핀테크 산업에 대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으며 뒤를 바짝 쫓고있다. 앞이 깜깜한 절체절명의 순간이긴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를 대처하다 보면 어두운 현실을 밝혀주는 촛불이 될 것이며, 강하게 친 팽이가 오래 돌아가듯이 위기를 딛고 성장한 산업이 이보다 더한 위기가 찾아 왔을 때 바람에 꺼지지 않은 촛불이 될 것이다.

<http://www.fnnews.com/news/20161125104622631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18868&code=11171313&cp=nv